

“납부칩 없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업체 뒷거래 폭로

나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대행업체 직원들 ‘회사비리 폭로’

대행업체 A사 “폭로 내용 상당부분 일방적이고 억울하다”

나주시 “사실관계 벗어난 부분 있어 정확히 조사할 것”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매일 뒷돈을 받고 수수료납부 필증인 ‘칩’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수거해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전남 나주시 지부는 11일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인 A사 관련 비리를 폭로했다.

A사에는 차량 운전원 4명과 수거 담당 직원 8명 등 총 12명 근무 중이

다. 이 중 8명은 노조원이며 지난해부터 나주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원들에 따르면, A사는 나주시로부터 연간 10억9000여만원의 대행료를 받고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 화순군 소재 전문 재활용업체인 B사까지 운반하는 용역을 맡아하고 있다.

대행료에는 B사에 지불해야 할 재활용처리비(1당 13만원)와 직원 임금, 수거차량 수리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이 포함됐다.

노조원들은 “A사가 칩을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온 중소업소 15곳으로부터 매일 일정 금액의 뒷돈을 받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수거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A사가 업소 15곳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누린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4년(46개월)이라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또 “A사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2년 간 수

집운반이 금지된 ‘다량배출사업장’ 35곳을 대상으로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했다.

노조원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그간 A사는 상당한 부당이득을 본 셈이 된다.

나주시 조례에 규정된 ‘다량배출사업장’은 영업면적 200㎡ 이상 휴게음식점과 1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이다. 해당 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업체와 개별 계약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나주시와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간 내 다량배출사업장 35곳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왔다는 것이 노조원들의 주장이다.

노조원들은 나주시가 사실관계 조

사를 벌여, A사가 용역계약 과업지시를 위반하고 그간 벌어들인 부당이득금을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A사 직원들이 폭로한 내용 중에는 사실관계와 일부 다른 주장이 섞여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다량배출업소의 경우는 주장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해명에 나선 A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주장한 비리 내용은 사실 관계와 다른 내용이 많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칩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 15곳의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뒷돈을 받고 수거했다”는 노조원 주장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장애인 가구, 미혼모, 독거노

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만 받고 수거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며 “현재 12곳은 정상적으로 칩을 부착해 반출하고 있고, 3곳도 3차 계약을 통해 다 회사를 통해 정상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량배출사업장 수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물리적 인 거리로 발생하는 수집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B사가 수거해야 될 음식물 쓰레기를 자사(A사)가 일부 대신 수거해 의혹을 샀다”며 “현재 적발된 계약 건은 변경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업무 방식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나주시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시민단체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이 11일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정부의 집값 폭등 정책을 비판하고 집값 하락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버스 광고를 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 학살 중단, 국제사회 강력 대응을”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발족



광주시민사회가 권력 장악을 위해 자국민을 무차별 학살한 미얀마 군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미얀마가 민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조치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종교·인권 등 30여개 단체로 꾸려진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이하 광주연대)’는 11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발족식을 연 뒤 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연대는 “미얀마에서는 1980

가리기 위한 언론 통제, 특수 부대의 투입에 이르기까지 2021년 미얀마는 1980년 5월 광주의 판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연대는 “광주시민들은 자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인 폭력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무차별 살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또 “미얀마 민중이 민주주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민·관·정·교·전 세계의 민주적 양심 세력들이 함께하는 연대에 나서겠다. 정부는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에 나선 미얀마 민중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미얀마 시민들은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넘어 유엔군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정 국가가 집단학살이나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반인륜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국제사회가 강제 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유엔 원칙이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김민정기자

성범죄 피해 의뢰인들 추행한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전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비교개로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또 다른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 의뢰인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C씨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던 중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